

2-1.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 평가

○ 수립과정 일정 공유 및 영상 상영

○ 평가 내용

- 시 행정 및 사업체계는 분야(대상)별 체계이나, 계획은 전략 중심이라 소관부서 정하기가 어려움 있었음
-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사업계획 반영하는 체계 부족. 계획의 예산 및 추진 행정 반영의 한계 있음
- 분과에서 생각하고 고민한 전달체계에 대한 생각과 사업부서, 수립추진단의 개념이 달랐음. 동일한 개념과 언어로 정리해서 계획 수립하는 것에 어려움 있었음. 실무분과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수립추진단에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 있음
- 저소득 복지 욕구보다 일반 지역주민 복지 욕구와 계획 중심임. 전략 중심 계획에 대한 논의 광범위하게 이루어짐. 전체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보다 각 참여 기관의 이해관계가 투영된 사업들도 있는듯함. 생각의 차이와 민과 관의 이해의 차이도 있었음.
- 3기 복지계획은 실무분과의 고민과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였음
-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과 개념에 대한 합의가 우선 필요함. 일반 지역주민 중심인지,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(현 복지서비스) 중심인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합의 필요함
- 생활보장 등 저소득 복지사업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고민 필요. 4년 후에는 더 보편적 복지의 방향이 될것이라 예상. 일반지역주민 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취약계층 복지에 조금 더 신경써야 함.
-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과의 의견,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계 필요
- 수립추진단 구성시 공공(행정)에서는 정책팀장님들 대부분 참여하였음. 대부분 행정적으로 사회복지직의 참여 등 업무와 관련된 공공의 참여 필요
- 대안 :추진단 위원이 분과를 담당해서 분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
- 수립추진단의 역할 모호함. 추진단과 분과의 연계 및 유기성 부족
- 욕구조사 내용과 전략의 매칭이 부족함. 조사의 거로가가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
- 전략을 선정하기 전에 분과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전략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야함
- 전략 중심 계획 수립이다 보니 분과 관련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(전달체

- 계전략에서)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있었음
-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으나, 시민의 의견수렴, 분과의 의견수렴, 수립추진단의 의견 따로 개별적으로 운영된 느낌이며 연계되는 부분이 적었다고 생각됨
 - 평가 및 모니터링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수립과정에서 실무분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
 - 실무분과 위원은 수립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는것에 어려움 있음
 - 대학생 서포터즈 등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새로운 시도가 좋았음
 -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보다 지속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듯함
 -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지역복지가 더욱 발전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람
 - 기관에서 담당사업에 대해서만 고민하다가 협의체 활동을 통해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하는 측면, 더 많은 관심과 참여 필요
 - 협의체 및 통합서비스지원분과에 대한 역할 이해 필요

2-2. 2015년도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 의견수렴

- 계획 수립과정의 대학생서포터즈처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상시 창구 마련 필요.
-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필요
- 동주민복지협의체 활성화 : 동별 위원장에 따라 활성화 정도 다름,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안타까움. 인근의 복지기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
- 초기 구성시에는 어려운 이웃 직접 찾아내고 도와주는 목적이었으나, 점차 사례회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.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함

3-1. 자체교육 “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 : 근로의욕을 중심으로“ (장홍석, 김윤희)

1) 주요내용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
 -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정의
 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

	<p>○ 자활대상자(조건부 수급자)의 탈수급 의욕에 미치는 요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리·정서적 요인 - 사회관계적 요인 - 제도적 요인 - 현행제도의 문제점 요약 <p>2) 느낀점 나누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의욕은 3년이내 가장 강하다고 하며, 이 시기에 적극적 개입필요 - 탈수급후 제도적 완충장치 필요함. 자활 수요자와 공급자의 차이 존재함 -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 필요함. 자활사업 36개월 참여후 희망리본사업(노동부)로 이관됨에 따라 대안 마련 필요 - 함께 가는 사회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- 복지는 휴먼서비스, 사람을 대하는 사람중심 서비스임에도 지나치게 성과중심의 현 정책의 문제 있음. 전문성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함 - 전국 기초단체협의회, 시·군·구청장 “복지디폴트” 선언. 지자체 사회복지비 평균 연 11% 증가, 복지의 국가역할 강조 <p>4-1. 차기 회의일정 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시 : 10월7일(화) 오전 10시 - 주요내용 : 자체학습, 2015년 시행계획 검토 *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계획 매뉴얼 미배부 상태이므로 자체학습 중심으로 10월 초에 진행 - 10월 : 무봉복지관(김세련), 수원시장장애인복지관(김소현) 우만지역자활센터(운영사례, 자활자립 관련 실제 운영 등) - 11월 : 아동학대예방특별법 관련 교육(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) * 기타 : 우수분과 활동 관련 : 협의체 홈페이지 가입자 명단(김은신과장님)
기타사항	<p>* 10월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회의</p> <p>일시 : 2014. 10. 7(화) 10시</p> <p>장소 : 비즈니스 건강카페 샘</p> <p>내용 : 복지기관 자활사례 - 무봉종합사회복지관,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우만지역자활센터</p>